

2015

연구보고서-25

I S S U E P A P E R

## 다문화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수행과제명 • 다문화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송효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다문화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수행과제명  다문화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

 Tel: 02-3156-7094

 e-mail: hjsong@kwidimail.re.kr

### 요약

다문화사회가 진전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의 자녀들에 대하여  
현행 지원 법제에서 가족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이 미치지 못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과, 현행 법제도 체제 밖에 놓여 있어 신분과  
권리보장 자체가 시급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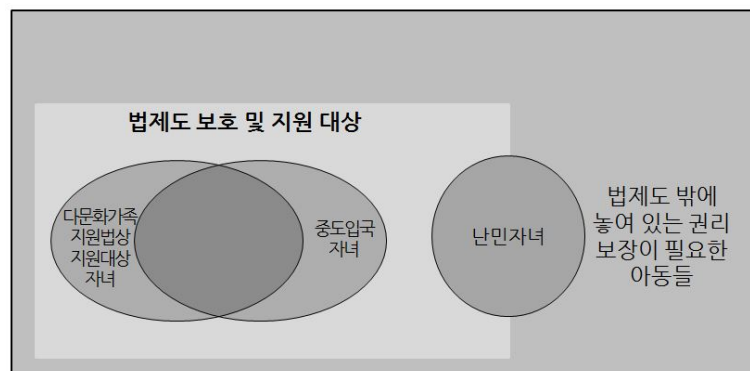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송효진·김소영·안소영·김연재(2015). 다문화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 이슈페이퍼는 송효진·김소영·안소영·김연재(2015).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

## 1 배경 및 문제점

-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및 난민 자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의 입양과 파양,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대해서도 현행 법제도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한편,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아동, 난민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체류하는 아동은 기존의 법제에 포괄되지 못하고 여전히 법제도 밖에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의 다문화가족지원 대상 확대라는 관점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현행 지원 법제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이 미치지 못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과, 현행 법제도 체제 밖에 놓여 있어 신분과 권리보장 자체가 시급한 그룹으로 나누어 접근하여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음.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1] 다양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의 자녀

## 2 법·제도 개선방안

### 1) 지원 확대 방안

#### ■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해체에 따른 자녀 보호

##### ▣ 다문화가족의 이혼에 따른 자녀 보호

-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이혼위기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혼전후의 위기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이혼 후 문화적, 언어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으로 부모역할에 대해 곤란을 겪는 부모가 많으며, 면접교섭권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결혼이민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설득하는 상담이나 교육절차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가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신청이 접수된 가족에게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연계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표 1〉 「다문화가족지원법」이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주요 규정 개선안

현행	개선안
제7조의2 〈신설〉	제7조의 2(이혼전후위기다문화가족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려는 다문화가족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위기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면접교섭·

현행	개선안
	<p>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절차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호하고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다문화가족의 이혼 후 양육권자와 친권자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고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사조사관과 상담전문가의 이해와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인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결혼이민자가 양육권자가 아닌 면접교섭권자가 된 경우 현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지만,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하여 체류기간의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출입국관리법상 명시될 필요가 있음.

〈표 2〉 「출입국관리법」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주요 규정 개선안

현행	개선안
〈신설〉	<p>제25조의4(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 의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p>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다문화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보접근성과 언어, 제도에 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용에 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이에 홈페이지에 다문화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식 작성 시 한국어 및 우리나라 양육비 관련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요구됨.

#### ■ 중도입국 자녀의 입양과 파양에 있어서의 보호

- 현재 외국 국적의 아동을 대한민국 국적의 양친이 입양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하지만 본국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입양 자체가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아동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이 필요함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입양이 성립하여 후에 입양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많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제입양절차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석광현 외, 2010; 안소영, 2011)
- 아동과 양친 사이에 진정한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의사 및 양친될 자와 아동 사이에 유대관계를 형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사전양육 기간을 요구하거나, 입양 전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재 중도입국자녀들의 입양에 적용되는 민법상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 절차를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바로 파양으로 이어지므로 파양되는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됨.
- 결혼이주여성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또는 혼인 후 이혼하여 중도입국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양에 중도입국자녀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들의 국적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으로 포섭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파양 당하는 중도입국자녀에게는 파양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표 3〉 「국적법」간이귀화관련 주요 규정 개선안

현행	개선안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② (생략) 〈신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양되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파양된 사람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재혼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상대배우자의 전혼의 자녀와 양친자 관계 해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양자의 복리에 적합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나, 향후 중도입국자녀의 파양 사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판례가 집적되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 언어적 문제에서 체류자격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은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면 신고를 하기도, 구제를 받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중도입국자녀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학대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쉼터나 자립시설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생계비나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등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함께 입소하여 심신을 치료하고 재활 및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에 대한 별도의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다

문화지원법에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 다문화가족지원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 ▣ 다문화가족지원 대상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선행연구(박복순 외 2013:66)에 의하면 “지원대상 확대여부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이주배경의 자녀들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와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한 경우가 대다수임을 심층면접을 통해 알 수 있었음.

- 다문화가족지원 대상 확대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이주 및 이민을 배경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이를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안하였음.
- 2안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난민자녀에 대한 특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표 4〉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자녀에 대한 특례 관련 개선안

현행	개선안
〈신설〉	제14조의3(난민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난민법」 제2조부터 제4조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자녀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확대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입양을 통해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 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가 영유아를 양육



해야 하는 한부모의 경우 현재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활동허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일 경우, 그들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양육지원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 특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도입국자녀와 난민자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표 5〉 「한부모가족지원법」 외국인에 대한 지원 특례 관련 개선안

현행	개선안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u>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생활 중에 국민과 생계를 같이하고 양육한 자신의 친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부터 제4조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및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 난민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개선

### ▣ 난민신청과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인도적 배려 부족 개선

- 난민신청과정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미성년자녀,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난민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며, 송환대기실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 및 기준이 정부차원에서 관리되지 아니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미성년자녀를 동반하거나 임신부인 경우, 특히 출입국항에

서의 난민신청접수부터 난민인정심사 회부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민법」에 절차 신속처리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음.

-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난민을 위해 국선변호인 등 지원 규정 명시, 항공사가 아닌 법무부 주체의 송환대기실 운영 및 관리, 임신부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난민, 미성년 난민 등에 대한 의식주 관련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였음.

〈표 6〉 「난민법」 보호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⑤ (생략)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및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결정을 하여야 하며 의식주의 제공에 있어 인도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 있어 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

- 난민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난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임신부나 출산 여성에 대한 추가지원 등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음.

- 선행연구(한지영, 2014:147-148)에서 제안된 바 있는 「난민법 시행령」제17조 상 난민신청자가 임신부이거나 만3세 이하의 자녀를 동반한 경우 추가생계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방안을 본 연구에서 인용하여 소개하였음.

〈표 7〉 「난민법」 생계비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이하 생략)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임신부이거나 만3세 이하의 자녀를 동반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출처: 한지영(2014:148)

■ 인도적체류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처우 및 지원개선

- 인도적체류자에 관해 국제관례는 난민인정자에 부응하는 대우를 해주지만 현행 난민법상 우리나라의 인도적체류자는 그 보호가 미흡함.
- 이에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성격상, 적어도 인도적체류자로 인정 된 경우까지는 외국인특례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한지영 2014:154) 개선안으로 제안하였으며, 난민신청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표 8〉 「긴급복지지원법」 난민지원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1안)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현행	개선안
<p>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2. (생략)</p> <p>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이하 생략)</p>	<p>"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2.(현행과 같음)</p> <p>3. 「난민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및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이하 현행과 같음)</p> <p><b>(2안)</b></p> <p>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2.(현행과 같음)</p> <p>3. 「난민법」 제2조제2호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및 「난민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및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이하 현행과 같음)</p>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2) 권리 보장 방안

### ■ 출생등록의 문제 개선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그들의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국의 영사관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 할 방법이 없음.
-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브로커를 통해 본국으로 보내거나, 아이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로를 밟게 되며, 이는 난민도 마찬가지로,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는 물론 난민인정자도 자국의 영사관에 접근이 위험하므로 출생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출생등록이 불가능하면 아동의 신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교육권과 의료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아동 학대나 착취 또는 탈취 등의 범죄로부터 지켜줄 수 없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 하였음.

● 첫째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출생신고 체제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 신고 특례를 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선행연구(김철호 외, 2013:100)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상 ‘특종신고편철’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음.

〈표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국내출생신고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 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 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 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u>외국인국내출생증명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u> (이하 생략)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표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외국인국내출생신고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현행	개선안
〈신설〉	제69조의2(외국인의 국내출생신고의 접수·등록 및 증명) ①법제44조제5항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내 외국인출생등록부에 등록하고 신고서류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전항의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외국인국내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성명 2. 성별 3. 출생연월일 4. 외국인등록번호 5. 국적(난민법에 의한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 자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자, 기타 국적이 불명한 경우는 제외함) ③전2항의증명서의 발급과 관련 한 그 밖의 사항은 동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둘째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의 출생사실이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로 개선되어야 함.
-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함(송효진 외, 2013;109).
- 국민이 아닌 자의 국내 출생사실 통보에 따른 출생등록부와 증명서 발급제도가 갖추어져야 하며 아울러 출생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등록하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할 의무(출입국 관리법 제84조)를 면하게 해주어야 하고, 출생등록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

〈표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통보제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현행	개선안
〈신설〉	제4조의3(외국인의 국내출생 등록 및 증명에 관한 특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의 통보, 등록과 증명은 국적 및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이 법에 의한다.
〈신설〉	제44조의2(출생의 통보) ①의사·조산사 또는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 후 3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만에 관여한 자가 의사 또는 조산사 면허가 없는 경우, 출생통보시 보건소가 발급한 출생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출생통보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일시 및 장소 2. 출생아의 성별 3. 산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하며,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등 부득이 기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출생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출생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2조(과태료) ①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이 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생통보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출처: 송효진 외(2013:111)의 <표 V-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출생  
신고 관련 주요규정 개정안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함.

## ■ 이주아동 관련 체류 문제 개선

- ▣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는 아동의 강제퇴거 가능성은 불안정한 생활, 아동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교육권 침해 등 아동의 인권과 건강한 성장의 저해로 이어 짐.
- 이를 위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통해 미성년 외국인 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2〉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② (생략) 〈신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성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시행령에는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를 허가한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음.
- 우리나라의 체류허가 특례제도가 인도주의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사항을 명시하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표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특별체류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구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2.(생략)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2.(현행과 같음)



현행	개선안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이익 등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②~③ (생략)	4. 자녀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고 있거나, 중병으로 국내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인도주의(人道主義)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 아동구금 문제의 개선

- **현행법상 미성년자도 강제퇴거 대상인 경우 외국인보호소에 수용이 가능하며, 어린 영유아 또한 부모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로 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아동구금을 전제로 한 외국인보호에 있어 어린이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임.
  - 미성년자는 보호해제 및 보호관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족실에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히 보호해제, 보호관찰을 원칙으로 하는 구금대안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또한 가족실의 환경도 부득이 예외적인 경우 아동 임신부 등의 보호 가능성에 대비 난방, 식사, 의료 등에 있어 배려가 되어야 함.

〈표 14〉 「출입국관리법」 보호 관련 주요 규정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및 보호·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경우에만 미성년자녀와 부모를 동반하여 보호할 수 있는 곳에서 보호할 수 있다.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단서,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출처: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함

## ■ 의료권과 교육권의 보장

- 앞에서 검토한 출생등록과 체류의 문제는 이러한 의료권과 교육권 등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출발이고 전제이며, 성장하는 아동을 위하여 시기를 놓치는 것 자체가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권리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의료권의 보장을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의 가입이 고려되어야 함.
-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입학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을 의무사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 소결

■ 이상의 법제 개선안을 요약·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5〉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안

지원 확대 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의 이혼에 따른 자녀보호의 문제	
- 이혼전후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필요	- 이혼전후의 위기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법원과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계모색 및 이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근거규정 마련(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의2 신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의 문제	- 법원의 가사조사관 등 이혼절차에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인력확대
- 면접교섭권행사의 문제	- 면접교섭권 행사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보장: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기간 연장 명시(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4 신설)
- 아동탈취의 문제	- 아동탈취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중도입국자녀의 입양과 파양에 있어서의 보호 문제	
- 입양절차에서의 미성년 중도입국자녀의 보호 문제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으로서 국제입양절차의 법제화 - 입양전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중도입국 입양아의 보호를 위한 방안 강화
- 파양에서의 미성년중도입국자녀의 보호 문제	- 귀책사유 없이 파양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화 - 귀책사유 없이 파양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간이귀화자격 부여(국적법 제6조 제3항 신설)

지원 확대 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문제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아동폭력 피해 다문화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상담, 지원 등 강화, 근거 명시
다문화가족지원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의 확대 문제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난민자녀에 대한 적용특례규정 신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3 신설)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다문화가정에서 양육된 중도입국자녀, 난민자녀를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3항 개정)
난민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개선	
- 난민신청과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인도적 배려 부족	- 난민신청과정에서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신속처리 특례 및 의식주제공에 있어 인도적 배려 규정 명시 (난민법 제6조 제6항 신설)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 있어 임신부와 자녀에 대한 고려의 부족	-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 있어 임신부 및 만 3세 이하 자녀를 동반한 경우 추가 생계비지급 규정 신설(난민법 제17조 제2항 신설)
- 인도적체류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 필요성	- 인도적 체류자 및 그 자녀를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위국인의 범위에 포함(긴급복지지원법 제1조의1 제3호 개정)
출생등록의 문제	- 가족관계등록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특종신고서류 편철장 내 외국인출생등록부를 마련하여 국내출생사실을 등록·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개정, 동 시행규칙 제69조의2 신설) - 가족관계등록법에 외국인 국내출생 등록 및 증명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의 국내출생신고 등록 근거 마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신설) -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 도입(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신설, 동법 제122조 제2항 신설)
이주아동 관련 체류의 문제	
- 미성년 아동의 강제퇴거 문제	- 출입국관리법상 미성년 외국인 아동을 강제퇴거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명시(출입국관리법 제46조 신설)
- 아동의 가족결합권 보장	- 아동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체류허가의 특례규정 개정(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 신설)

지원 확대 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아동구급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지 않고 보호해제 및 보호관찰을 원칙으로 하고, 임신부, 미성년자를 양육보호하여야 하는 외국인 역시 보호해제 및 보호관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수단으로만 가족실에 보호(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63조 제6항 개정)</li> </ul>
이주아동의 의료권과 교육권 보장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료보험 가입 등 방안 모색</li> <li>-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상 입학과 전학에 있어 학교장 재량 규정을 의무규정화(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개정)</li> </ul>

출처: 연구진 작성

## 2 기대효과

-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안 마련을 통한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제고
- 다문화가족자녀, 이주아동, 난민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안 마련을 통한 출입국 관련 정책 지원
- 이주아동 관련 법령의 개정

## 참고자료



- 김철효·김기원·소라미·신예진·최서리(2013).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 박복순·박선영·송효진·선보영·강기정(2013).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 석광현·이병화(2010).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 송효진·박복순(20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 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소영(2011). 헤이그국제입양협약과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지영(2014). “난민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현행 「난민법」의 비판적 검토”, 『젠더법학』, 제6권 제1호, 125-160.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법무부  
**관계부처** : 대법원, 교육부, 보건복지부